



(사진제공: 뉴스시)

통일과 한반도의 식량문제



PROFILE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미국식품공학회(IFT) Fellow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원과제이다. 그동안 비공개원칙으로 일부 사람들에 의해 취급되던 통일 담론이 대통령의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으로 각계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보의 부족으로 그간 정부 기관에서 대북문제를 다루었던 소수의 전문가들 의견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우리사회에 통일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제까지 통일은 군사적인 문제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

냉전구도가 와해되고 글로벌 시대로 변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소박한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이를 실천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정부의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는 이 일을 시작하는 시발점이라고 믿고 싶다.

통일시나리오 1. 남한은 북한주민을 먹여 살릴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의 행복 추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사는 일인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북한의 실정이다. 따라서 식량문제는 통일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전략 연구'에서 2015년을 통일 시점으로 했을 때 17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단행본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



정부는 매 10만톤 수송완료시마다 우리측 인원이 북한지역에 들어가 분배현장을 확인한다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9.14 개성과 고성지역 각각 2곳에 대한 분배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2005년 9월, 북한의 한 식량공급소에 적재되어있는 쌀 포대. (사진제공: 뉴시스)

보(식안연, 2012)'를 출판하였으며, 통일미 120만 톤을 비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매년 60만 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2년 후에는 쌀가공산업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 추가예산은 4,8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3년도 외교통일예산의 11.8%에 해당한다.

급격한 통일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비축양곡이 있다고 해서 북한주민에게 즉시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법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저소득 영세민에게 식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복지제도를 남한에서 먼저 시행해야 한다. 남한 국민의 7%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1인당 월 10kg의 쌀구



한 국제구호개발기구가 심각한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 평안남도 평남 안주시와 개천시에 있는 유치원 및 소학교에 배분될 밀가루 500톤을 실은 물자운송차량이 2012년 9월 21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뉴시스)

폰을 무상 지원하여 쌀과 쌀가공식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가예산은 8,100억 원으로 2013년도 복지예산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될 것이며 이들은 한국 국민으로 자동적으로 쌀쿠폰 혜택을 받게 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안정되고 그들의 식량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통일 응집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힘을 우리 안에서 키워내지 못하면 통일은 불가능해 진다.

통일시나리오 II. 통일 후 북한 농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실현된다.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는 일차적으로 농업생산성의 저하에 기인 한다. 우량종자의 부족, 비료, 농약, 에너지 등 농업 인프라의 부족과 무리한 다락밭 조성에 의한 산림훼손과 토사유실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성은 남한의 약 5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농가인구 1인당 생산성은 남한의 28%에 불과하다. 통일이 되어 남한의 농업기술과 우량종자가 보급되고, 비료, 농약 등 농업 인프라가

갖추어 지면 북한의 식량 생산성은 2-3년 내에 남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면적이 9% 많고 인구는 2,400여만 명으로 남한의 1/2에 불과하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식량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어 수 년 내에 식량자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남한의 식품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식품생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남한의 식품가공공장 평균 가동률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22-50% 수준으로 통일 후 예상되는 식품수요 증가는 현재 남한의 가공시설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 현재 거의 전무한 북한의 식품생산 능력은 통일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남북한 모두 현재 남한 수준의 풍요로운 식생활을 할 수 있다.

통일시나리오 Ⅲ. 통일은 남북한의 과잉과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회이다.

한반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수천 년간 살아온 한국인들이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한으로 나뉘어

65년 이상 전혀 왕래 없이 생활하면서 남한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영양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북한은 경제난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북한 주민은 1일 500g 정도의 식량배급(주로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육류나 우유류 같은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인당 평균 섭취에너지는 1일 1600 kcal로 추정되며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한 폐결핵 등 영양 결핍과 관련된 질병이 만연하고 있으며 주민의 평균체위가 남한 국민에 비해 훨씬 낮아져 왜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UNICEF/WFP/북한당국이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임신부의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저체중 어린이가 남포, 평양지역에 15%, 함경북도와 양강도에는 25%에 달하며,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stunting) 어린이의 비율이 남포시에 25%, 함경남도에는 48%에 이른다.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식량부족이 더욱 심각하다.(표 1)

〈표 1〉 한반도 분단 60여년의 영양인류학적 평가

	남	북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g)	1,300	500(+)
에너지 섭취량(kcal)	2,000	1,600
에너지 구성비(탄수화물:단백질: 지방)	65:15:20	80:12:8
곡물자급률(%)	26	63
평균신장(cm, 남자/여자)	173/159	166/155
체중변화	성인의 33% 비만	어린이 42% 영양실조
결핵 발생률/사망률(명, 인구 10만명당)	90/8	344/25
1인당 GDP(US\$)	23,679	506
정치체제	개방형 자유민주주의	폐쇄형 공산사회주의

자료: 이철호 외,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2012), 통계청(2013)



한 국제구호단체가 2010년 4월, 인천항에서 대북지원물품 선적식을 열고 북한 9개 시, 도 50여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12000여명 원생에게 지원될 생필품, 식량, 교육기자재 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뉴시스)

한편 남한 국민들은 1일 평균 1.3kg의 식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중 20%인 270g이 육류, 우유류, 어류, 계란류 등 동물성 식품이다. 식품에너지 섭취량은 2000kcal 수준이나 그 구성비를 보면 탄수화물 65%, 단백질 15%, 지방 20% 수준으로 동물성 식품에 의한 지방의 섭취가 크게 늘었다. 과식과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 인구수의 증가(33%), 특히 어린이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대사증후군 성인병이 크게 만연되어 있다.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하면서 전체 식량에너지 자급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곡물 자급률은 26%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식량의 30%를 쓰레기로 버리는 무절제한 낭비구조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영양결핍 못지않게 남한의 과잉섭취에서 오는 부작용 또한 고쳐져야 할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

은 남한의 영양과잉과 북한의 영양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을 위한 합리적인 식량 영양 최적화 모델을 수립하여 통일 이후 건강하고 경제적인 식품 공급 및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렵게 성취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자유민주통일이 되려면 북한 동포들이 보고 함께 살고 싶은 통일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되면 평등하게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서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남한 사회가 제시해야 한다.

2007년 4월 4일 오전,
개성 공단내 봉동리에
서 열린 민주노동당 한
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
한 개성 나무심기 행사
에서 민주노동당원과
어린이가 대추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사진제
공: 뉴스시스)

